

업무분야

공정거래 규제 환경은 시장 구조의 고도화와 산업 간 경계의 붕괴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제재 역시 전통적인 담합·불공정거래를 넘어 다양한 거래 구조와 신산업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사건은 조사·심의 단계에 그치지 않고, 행정소송, 민사 손해배상, 형사 절차로 연계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바른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 관련 정부 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 공정거래 사건 수사 경험을 갖춘 검사 출신 변호사, 다년간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해 온 변호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정책의 집행 구조와 수사·송무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바른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전 리스크 관리부터 조사 대응, 행정·민사·형사 분쟁에 이르기까지 공정거래 이슈 전 단계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기업결합, 특수거래 분야 등 공정거래법 전 영역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통해 각 사건의 성격과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바른은 공정거래 사건이 기업의 경영·재무·지배구조·형사 리스크와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형사, 조세, 금융, 기업법무 등 연관 그룹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사건의 파급 효과까지 고려한 종합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성원



신동권



김용하



서혜숙



정경환



백광현



정양훈



이기쁨

주요업무분야

공정거래 규제 대응 및 조사 자문

- 담합(부당공동행위), 카르텔 관련 사건 대응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사건
-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관련 사건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사건
- 기업결합 신고 및 경쟁제한성 분석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특수 거래 분야 규제 대응

- 하도급거래 관련 사건 및 자문
- 대규모유통거래, 가맹사업거래,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
- 전자상거래·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관련 자문
- 약관규제 및 표시광고 관련 사건
- 소비자보호법 관련 분쟁 및 자문

공정거래 관련 소송 및 분쟁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시정명령·과징금 등) 관련 행정소송
- 법 위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 기업 간 경쟁 제한 행위 관련 분쟁 대응
-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 및 대형 분쟁 대응

사전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 공정거래 관련 내부거래·담합·불공정행위 리스크 점검
- 기업 대상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공정거래 관련 법령·판례·정책 변화에 대한 자문
- 사전 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형사·조세·기업법무 등 연관 분야 협업 대응

- 공정거래 사건과 연계된 형사·조세·금융 이슈 대응
- 기업 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관련 종합 자문
-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힌 복합 사건에 대한 통합 전략 수립

대표사례

-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건
- 가구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건
- 쿨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공정위 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에서 공정위 대리
- 면세점사업자 담합 조사 건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조사 건
- 유제품 제조, 판매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조사 건
- A중공업의 부당공동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 분유제조 판매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대한 공정위 조사 건
- 출판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건
- 저작권 관련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위 조사 건
- 전문직역 사업자단체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사건

최근업무사례

공급단가 협의 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심사절차종료를 이끌어 낸 사례

예상매출, 점포인수 발원 관련 가맹사업법 신고 사건에서 실질 제재 없이 방어한 사례

대형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한 사례

인건비 부담에 의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급업자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수급사업자를 대리해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법정 서면 미교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네트워크 병원'에 가맹사업법 적용 관련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

결을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고한 사안에서,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선급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대리점으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당한 사건에서, 피 신고인을 대리하여 신고된 사항 모두 '무혐의'로 종결시킨 사례

[공정거래] 담합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책임제한을 인정받아 손해액 50%를 감액받은 사례

[공정거래] 납품업자의 대표자 및 제조업자의 대표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공정거래] 최근 성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도 가맹사업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공정거래] '특수관계 위탁운용 계약'이라는 표제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실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한 갱신거절을 인정한 사례

[공정거래]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점포환경개선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서,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신고혐의 전부를 심사절차종료 처분으로 종결시킨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사업자를 신고한 사건에서,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신고된 사항 모두 무혐의 등으로 종결시킨 사례

[공정거래] 엠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라는 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환급 받은 사례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약 7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공정위에 원사업자를 신고한 사건에서,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무혐의 등 처분을 받아 원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한 사례

[공정거래]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한 부당광고 심사 건에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 감면을 얻어낸 사례

[공정거래] 광고주들이 약관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을 주장하며 광고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광고의 특성과 체결 경위 등을 분석, 설득해 모두 기각시킨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 위반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에서, 하도급공사 관련 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무혐의 등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대리점들의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같은 이유의 공정위 조사에서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이끌어 낸 사안

[공정거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임대료 조정을 신청해 임대료를 2배 이상 증액하는 취지의 조정 및 임대차 변경계약을 도출한 사례

[공정거래] 치킨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일실이익의 2배를 손해액으로 인용받은 사안

[공정거래] 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시키는 이례적인 ‘조정권고’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공정위의 상습법위반사업자 공표 처분을 서울고법에서 처분의 이유제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취소시킨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공정위 조사 건에서 무혐의 판단을 도출

[공정거래] 1조원대 쟁점 소송에서 공정위 대리해 완승 이끌어 낸 바론

[공정거래] 약기제조·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TV홈쇼핑사의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여 공정위로부터 제재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령에 따른 벌점 경감점수를 적극 소명하여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면제(불요청)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오리 판매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서 심사보고서상 예상과징금 대비 대폭 감경된 과징금 등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치킨 프랜차이즈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점주를 대리해 치킨 프랜차이즈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갱신거절로 인한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용받은 사안

[공정거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제공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심사관이 형사고발 조치한 사건에서 무혐의 의결을 이끈 사례

[공정거래] 가맹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영업이익정보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맹 점주를 상대로 승소판결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피고(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수급사업자들)이 36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 청구기각과 다름 없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외국 법인 및 총판을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인력의 임금을 단가에 포함하기로 한 약정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공정거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제공한 예상손익표와 실제 손익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승소판결 이끌어

[공정거래] 대규모유통업법상 주요 법 위반행위가 망라된 사안에서 납품업자를 대리하여 대형마트의 법 위반행위를 확인받은 사례

[공정거래] 가격 및 시장분할 합의 사안에서 과징금 전부 면제를 도출한 사례

[공정거래] 추가공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 건에서 공정위의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공정거래] 수자원공사가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하자, 수자원공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법하다는 ‘경고’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행정] 담합을 한 1순위 감면신청 사업자에게 발주처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의 책임감면 대상임을 소명해 제재기간 ‘감경’ 결정을 처음으로 이끌어

[공정거래] 14년 지기 국내총판 토사구팽한 다국적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공정위 제재 받게 한 사례

[공정거래] 바른, 공정위-퀄컴 1조원대 소송에서 공정위 대리해 ‘압승’

[공정거래] 추가공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 건에서 공정위의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공정거래]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 조사 사안에서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도출

[공정거래] 공표문안의 표기방법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공정위의 인용재결 도출

[공정거래] 중견건설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공정거래] 노조가 공정위 제재대상이 된 최초 사안에서 공정위 제재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국내 최초 서비스(여행) 업종에 대한 다단계판매업 등록 결정 도출

[공정거래] 대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 내

[공정거래] 예상물량만 규정한 납품단가 입찰에 대한 관련매출액 산정 사건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를 신고한 사건에서 최대 포상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배전반 구매 입찰담합 사건에서 18개 사업자들 중 유일하게 무혐의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 면세점 사업자들의 인천국제공항 내 브랜드 유치 제한과 관련된 공동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부당위탁취소 및 부당단가결정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등 처분 이끌어

[형사] 당내경선에서 경력 등을 허위 공표하였다고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회의원을 항소심부터 변호해 무죄 판결 이끌어

[공정거래]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징금 분할납부신청 외 집행정지 신청도 잘 활용해야

[공정거래] 입찰담합으로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은 처분 후 분할로 신설된 회사에게 미치지 않아

[공정거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에서 건설사 중 유일하게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

[공정거래] 가맹본부인 “그리다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경인운하 담합 소송에서 SK건설 구원,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

[공정거래] 2014년 7월 25일 최초 시행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적용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행위를 제제한 최초 사안에서, 과징금 미부과 결정을 이끌어냄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인 SK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에서, SK건설을 대리해 심의절차종료(법위반 여부판단 불가로 사실상 무혐의처분) 결정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공정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부당한 지원행위로 볼 수 없음

[공정거래] 여행상품에 대한 TV홈쇼핑방송에서 표시광고법상 의무 주체는 여행업자가 아닌 홈쇼핑사

[공정거래] 3개 베이커리 사업자의 이동통신사 제휴할인율 담합사건에서 CJ푸드빌 대리하여 무혐의

[공정거래] 국내 유일한 생산자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자인 자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입찰담합은 경쟁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거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를 설득 내지 종용하지 않았음에도 담합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 입찰 내정가를 산정한 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공정거래] 포워드벤처스엘엘씨한국지점(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 소비자들이 아무런 불만없이 상품을 이용하고 있고 사업자가 검수정책을 강화하였다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공표명령부과는 부당

관련자료

백광현 변호사·신동민 변호사·이시윤 외국변호사, The Global Legal Insights Cartels 2023, 11th edition - Korea Chapter